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과학연구원장)

1. 공안문제연구소 감정서의 실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경우

- 1994년 7월 11일자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동렬의 감정서(12쪽)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분석과 총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석에서는 대표적 실례를 들어 문제내용을 여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맑스주의(공산주의) 노선을 미화찬양하고 이를 정당화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주장은 결국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체제를 정당화하며 저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사회과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새로운 사회과학을 창조하는데 기여한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지적으로는 물리학에서의 갈릴레오나 생물학에서의 다윈에 비교할 수 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좀더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낡은 사회질서에 속하는 모든 기득권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낡은 사회질서의 희생자들의 모든 열망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실상 자연과학분야의 어떤 위대한 발견보다도 더 지대한 것이었다. (23-24면)

최근에는 논란에 해체되고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국가가 붕괴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오류에 있다고 보는 것은 속단이다. 또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공이라고 보는 것은 더욱 순진한 생각이다.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모순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오늘날,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사이의 모순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고 신식민지에서는 제국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모순이 세계적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마르크스주의 이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25면)

마르크스가 독일 고전철학을 비판하면서 서술한 이 체제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의 본질을 가장 명확한 형태로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실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고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은 사회운동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49면)

둘째,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 또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등으로 왜곡 규정하며 비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167-169면, 234-237면, 342면, 377면, 397-398면) -이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왜곡 부각시켜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혁명의 정당성을 이끌어 내려는 단초임을 지적한다.

셋째, 현 정권(김영삼 정권) 및 현 정권의 개혁시책을 왜곡 비방하며, 현 정권 타도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토대로 일단 평가해 보면, 김영삼정권은 파시즘 체제의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정치적 민주주의 요소가 더욱 강화된 '이완된 파시즘체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화를 앞당기는 최선의 길은 종속 파시즘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의 강력함 힘으로 뭉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민중이 누려야 할 '자유민주주의적 권리'를 억압하는 위장된 파시즘체제를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244-245면)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해 김영삼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하여 한국경제의 구조 모순을 개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경제의 본질은 토지자본과 관료자본에 의한 기생성을 악화시켜 산업 독점자본을 강화하는 자본합리화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협력 강화는 결국 재벌주도경제를 귀결될 것이고 고통분담만을 강요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심화될 전망이다. (376면)

넷째, 남한사회 법체계(사법부, 검찰, 경찰, 안기부, 군 등)가 권력유지를 위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민중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을 탄압해왔다고 비방하며, 이들 억압적 국가 기구와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263면, 274-277면) - 이는 결국 현 정권의 법체계와 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과 역학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법체계는 지금까지 권력의 지배질서를 유지

하고 민족민주운동을 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 '법치국가' 라는 구호로 표상되는 법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법파괴행위는 은폐하면서 대중을 독재적 '법질서' 에 충실하게 만들어 왔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데올로기도 미국의 반공기지

(263면)

다섯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하여 당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어 실천을 고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단계 민족민주운동이 실현해야 할 전략적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 의 달성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하의 독점자본주의사회로서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로 분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권력은 형식으로는 한국의 군부를 비롯하여 독점재벌 등의 지배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주도권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군에 의한 한국군 작전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핵심이 내용의 하나인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를 통한 내정간섭으로 정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미국유학생을 통한 학문의 지배, 영화와 방송 등을 통한 문화의시장의지

(391면)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의 중요모순은 민족모순 즉 한국민중과 미국제국주의 및 그 예속세력간의 모순이 되고 당면한 전략적 과제는 식민지성과 예속파시즘의 극복 즉 민족해방=자주화와 반파쇼민주주의의 달성이다.

당면한 국면에서 반파시즘 민주화 투쟁의 중점은 민주정부 수립 투쟁과 반민주악법 폐지투쟁에 있다중략.....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2500만 노동자계급(가족포함). 600만 농민층 등 민중이다. (394-395면)

여섯째, 북한과 일치하는 맥락으로 한국사회의 근현대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1) 동학혁명을 '갑오농민전쟁' 으로 해석하고 있음 (62-63면) - 이는 북한 '력사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2권 753-754 면 참고)

2) 3.1운동 실패원인 규명을 지도조직역량 부재 및 전술부재로 들고 있음 (69-70면) 이 역시 북한은 3.1운동을 영도할만한 혁명적 계급과 혁명적 당이 부재했음을 강조하고 있음, 북한 력사사전 2권, 78,79면 참고)

3)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부각시키고 반면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주도의 항일 무장투쟁을 과대 미화, 왜곡소개하고 있음(북한의 역사조직인 조선광복회 활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74면, 81면, 83-85면 등) - 이 역시 북한의 '조선전사' 16권-22권의 맥락과 일치함)

4) 해방직후 미군정과 우열진영을 '친일파, 반민족세력' 으로 매도하고 좌익진영의 활동을 새로운 자주적 민족국가건성을 위한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미화하고 있음(26면, 93-97면 등)

- 이 역시 북한 '조선통사' (역사연구소) 하권 22장 1절 해방직후의 조선정세 부분과 일치함

5) 해방직후 좌익분자주도의 무장폭동인 대구 10일 폭동, 2.7

투쟁, 제주 4.3사건 등을 외세와 독재권리에 항거한 민중항쟁으로 미화하고 있음 (97-100면) -앞의 책 참고

6)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을 남한 당국의 친일과 처단, 토지개혁 등 민주변혁과제의 미진과 외세점령 등에 따른 계급모순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된 필연적 결과로 해석하고 있어, 결국 북한의 전쟁도발을 정당화해주고 있음(104면) 이는 북한조선통사(하) '조국해방전쟁' 편 참조

-결국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곡한 북한측 사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 남한 측 정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더나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임.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문건은 결국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마르크스 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공산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책자는 좌익 이적성문건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거두절미, 아전인수, 이현령비현령에 의한 왜곡으로 가득차 있다.

-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 집필 목적을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감정서는 '이적표현물'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3. 공안문제연구소와 편사

2. 공안문제연구소와 경찰, 검찰 및 안기부(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및 안기부는 무수히 많은 '이적표현물' 중에서 먼저 사람을 지목한 다음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다.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경우, 장상환, 정진상 교수는 김영삼 정부 초기 이른바 사정정국에서 지역토호, 대표적으로 악덕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언론인 <진주신문>의 지면을 통해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컬럼을 썼다. 진주에서 오도십적(五盜十賊) 중 한 명으로 지목되던 모인사는 진주신문사와 민교협 회장이던 장상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대치하다가 [한국사회의 이해]를 지목하여 안기부를 통해 사건을 만들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1994년 5월 24일자 감정서와 7월 11일자 감정서 2건이 있는데 전자는 안기부 모인사의 청탁으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감정서로 추정된다.

-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안 사실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3개월 동안 11명의 공안부 소속 경찰이 매달렸는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능력이 없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경찰의 경전과 같은 것이었다.

- 만 하루 동안에 걸쳐 진행된 검찰 심문에서도 담당 검사가 [한국사회의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사의 지적 수준을 잘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검사에게도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금과옥조였다. 공소장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을 주장한 거의 모든 대목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3. 공안문제연구소와 판사

- 현행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이적표현물 판단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판사가 재판할 때에도 자신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판단이면 족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그 기준이 된다. 게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책의 원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보통의 판사들은 업무의 과중 등의 이유로 원래의 책을 읽기보다 감정서에 의존하기 쉽다.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창원지법 앞에 개업 중이던 차정인 변호사는 책 30권을 급히 구하여 창원지법의 모든 판사들에게 돌렸다. 이는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에 대해 판사들의 건전한 상식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8월 30일 당직이었던 최원석 판사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창원지법의 모든 판사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를 감정서보다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 국가보안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처벌할 때에도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는 판단을 도우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을 왜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공안문제연구소와 자유민주주의

-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 이름으로 이적표현물을 낙인찍는다.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와 동의어이다.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신체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학문의 자유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의 자

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를 감정한 유동렬은 최근에도 <공안연구>에서 10년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 [한국사회의 이해]는 10년전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지금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감정하면 여전히 이적행위이다.

- 사상과 학문을 국가기관이 감정하는 것은 중세기의 종교재판과 다를 바 없다. 세계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중세기적 사상탄압에 대한 승리였다.

-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안문제연구소는 냉전질서가 만들어 낸 이 사회의 기생충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공안문제연구소는 해체되어야 한다.